

「가상통화 점검회의」 모두 발언

1. 인사 말씀

-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
- 오늘 이 자리는 최근 가상통화에 대해 금일 발표된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음

2. 주요 대응방향

(1) 가상통화 관련 정부정책의 취지

- 그간 금융당국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주력하였으며,
 - 지난 12.13일, 미성년자·비거주자 계좌개설 금지,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·매입·담보취득·지분투자 금지 방침을 발표하였음
-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가상통화 투기열풍과 ‘묻지마’식 거래가 만연한 가운데 하루에도 40% 가까이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일반국민들이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
-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음

- 본래 아파트 관리비,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 통화 거래의 매매계정(trading account)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
-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,
 - 불법자금의 문지기(gate keeper) 역할을 하는 은행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 계좌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함

(2) 주요 조치내용 및 당부말씀

- ① 오늘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「가상통화 특별대책」은 가상 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,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임
 -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,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하여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보다 세부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 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 주기 바람

-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주시기 바람
- 아울러,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

② 이와 함께,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주기 바람

-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*(12.13일)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

* 개인정보유출·해킹 등 위법행위는 엄정 대처, 본인확인, 미성년자·비거주자 거래 금지 등

- 또한,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·매입·담보취득·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 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
- 금융당국은 공정위,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현장조사 결과를 은행권에 제공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소비자 보호 및 전산보안관리 실태점검에 참고토록 하겠음

③ 한편, 금융정보분석원(FIU)과 금감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림

○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것임

○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와 달리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통화의 거래를 위한 일반법인계좌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어 불법자금의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,

- 국제자금세탁 기준의 취지*에 따라 통상의 법인계좌와는 특별히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

* FATF(Financial Action Task Force)는 '12년에 '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조치' 규정을 신설

○ 불법자금의 문지기로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, 정부는 내년 1월중 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」을 작성하여 은행과 공유하도록 하겠음

-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❶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, ❷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, ❸다수와의 거래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토록 하겠음

○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특히 ❶일반 법인계좌 개설시 취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을 강화하고, ❷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 드림

- 또한,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계획임

④ 또한,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·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을 예정

□ 오늘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의 실명확인 조치를 통해

- 새로운 실명확인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취급업자와 은행들이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홍보와 소통의 노력도 중요함
- 계좌이전 과정에서 실명확인이나 실명전환의 어려움과 다툼도 있을 수 있어 취급업자와 은행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
-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 드림

(3)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강조

□ 지난 13일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에서도 밝혔듯이,

- 금융위 차원에서는 가상통화로 인한 부작용과 리스크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,
-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,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음

(4)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당부

-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임
 - 별도의 중간 관리기관이나 검증기관 없이 P2P로 직접 연결하는 자기완결형 대안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태동했던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거래망에 의존해 서비스되고,
 - ‘묻지마 투기자’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

3. 마무리 말씀

- 오늘 논의한 대응조치를 통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실명확인 및 자금세탁 등 불법 및 의심 거래에 대한 은행의 상시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
 - 또한, 향후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과세목적의 자료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함
- 참석하신 여러분의 긴밀한 공조하에 상기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람